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미국의 보수적인 NGO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2009년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4년째 잇달아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94개 나라 가운데 자유국가 수는 89개국으로 변함이 없었지만 비 자유국가는 47개 국가로 전년에 비해 다섯 나라가 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체로 자유가 늘어난 반면에 구 소련 국가와 아프리카, 중동 및 중남미 지역 국가에서는 자유가 위축되었다. 자유의 진보가 곧 역사라고 믿는 사가(史家)가 많은데 세계적으로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니 큰일이다.

'프리덤 하우스'는 자유 가운데서도 언론의 자유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 언론의 자유야말로 모든 자유의 총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쓸는 것은 당연하다.

'프리덤 하우스'는 법과 제도가 보도 내용에 기치는 영향, 정치적 압력과 통제, 경

제적 압력, 언론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 등을 신문과 방송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해 총점이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라면 자유국가, 3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부분 자유국가, 61점 이상이면 비

우리나라 언론 자유 수준은?

자유국가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언론자유는 어느 그룹에 속할까?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2009년에 법적 환경 분야에서 9점, 정치적 환경 분야에서 12점, 경제적 환경 분야에서 9점을 받아 총점 30점으로 자유국가로 분류되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자유국가군에 턱걸이 한 템이다.

지식인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적지 않다. 하지만 '프리덤 하

우스'의 평가를 알고 나면 아직도 우리가 독재시대의 잔대로 자유를 재고 있다는 걸 실감할 것이다.

현장에서 밭을 뛰는 기자들의 모임인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의 평가는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와는 달리 우리나라 언론 상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우리 언론자유수는 2006년에 168개국 가운데 31위까지 올라갔지만, 2008년에는 173개국 가운데 47위로 떨어졌으며, 2009년에는 175개국 가운데 69위로 전년

상점의 주요 변수가 된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수는 과장되었을 개연성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권력이 언론의 미디어운영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있다. 국영매체는 물론이 러나 국영이라고 하기 어려운 매체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행사한다.

언론을 지원하는 외국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매체나 단체의 장도 그렇지만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진도 정부나 정당이 추천한다. 그래서 대통령선거 때가 되면 부지기수의 언론인이 캠프에 줄을 선다. 이런 사실까지 감안한다면 언론자유수는 더욱 뒤처질 것이다.

이런 제도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언론환경을 감시할 일차적 책임을 지는 학계를 권력의 주변부로 전락하게 한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좋은 언론이라는 물론 학계까지 권력의 휘하에 거느리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바라는 것은 하나의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고려대 언론학부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장화선



최근에 논의된 기후변화 국제협상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으며 포스트 2012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해지고 있다.

2013년부터 포스트 2012 체제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합의 외에도 세부 이행사항에 대한 논의와 각국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 교토의정서 체결에서 그 발효까지 9년여가 걸렸기 때문에 2013년부터

론 전환부문(전력)에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수질개선이라는 이름의 4대 강사업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EU국가 등이 원자력발전 후후 완전 폐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다행히 광주시의 경우는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마일리제 일종인 탄소은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탄소마일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광주시처럼 감축으로 발생되

'기후변화 대처'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협약 체제가 발효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의 코펜하겐 합의의 결과로 올 1월까지 각 국가별 2020년까지 온실가스 증기 감축 목표를 UN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노르웨이 30~40%, EU국가는 20~30%, 일본 25%(이상 '90기준), 호주 5~15%(00기준), 미국 17%, 캐나다 17% 감축(이상 '05기준) 등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BAU 대비 30% ('05기준 4%) 감축량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기후변화세계민중총회의 감축 목표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17)까지 1990년 대비 50% 온실가스 감축이다.

UN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일명 코펜하겐회의)의 감축 목표량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 회의의 위상과 주요 당사국 및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의 극명한 차이를 본다.

우리 국내상황은 어떤가 보자.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증기(2020년)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국제무대에서 개도국 차원의 빌 브른 대처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글쎄다. 우선은 기존에 국가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계획을 포함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체해 '국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국가녹색성장기본계획 등 주간계획을 정비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쭉 빠져 있다. 물

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금융계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독특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민관학의 거버넌스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

다만, 광주시 탄소은행제의 확대개선 방안으로 광주시의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의 두 번째인 수송부문 특히 개인승용차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연계해 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최근에 우리 정부시책에 의거 보험업계에서 시행중인 요일별자동차보험제나 자동차공회전방지시스템 등 수송부문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점에 있다.

광주는 지구평균 기온보다 약 3.8°C 이상, 우리나라 평균기온보다 약 1.5°C 이상 높은 약 2.5°C 상승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광주지역은 국내 어느 곳보다도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재해, 도심 열섬현상 등 그 피해를 많이 겪을 순위 후보라는 것이다.

기준에 광주시나 시민단체차원에서 꾸준히 진행해 온 친환경 정책들로 버스준공영제, 버스도착안내시스템, 폐선부지푸른길가꾸기운동, 앞산뒷산지기네트워크, 학교숲가꾸기, 광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푸른광주21협의회 사무처장>

기고

나윤환



21세기 대한민국은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으로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5위, 그리스전의 승리로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등 스포츠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0년 대한민국은 어려운 점도 많지만 선진국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방안전 분야는 부족한 점이 많다. 70~80년대 한강의 기적을

100%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5분을 초과하는 주요원인은 국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의식 부족, 골목길 불법 주정차, 도심 내 교통체증, 진입로 협소 등 소방통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인은 아파트와 차량이 없으면 살기 힘든 시대가 되다 보니 아파트 입구나 단지에는 언제나 넘치는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실제로 2004년 경남 창원 빌라 화재시 주택·상가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4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생명 지켜주는 '소방 출동로'

이론 고속성장 과정에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다 보니 안전의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씨랜드 참사, 2003년 천안 학살사고, 2008년 국립현충원 붕괴, 2010년 대전 대도시 교통체증, 진입로 협소 등 소방통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인은 아파트와 차량이 없으면 살기 힘든 시대가 되다 보니 아파트 입구나 단지에는 언제나 넘치는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실제로 2004년 경남 창원 빌라 화재시 주택·상가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4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소방안전 분야는 부족한 점이 많다. 70~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노력은 차량 운전자의 도움 없이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소방통로는 곧 생명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항목을 실천해 주길 부탁 드린다.

첫째, 긴급차량(소방차·구조차·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하기

둘째,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셋째,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넷째,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차량막 등 설치행위 금지

다섯째,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 선(황색선) 설치 및 주차 금지

여섯째, 아파트 진입로 깃길 및 커브 길(모서리) 주차금지 등이다.

우리의 '소방차 길 터주기'라는 작은 실천은 남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도 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의 선진화 없이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 한다 해도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순천소방서 서장>

아직도 만연하는 인종차별 의식 이젠 버려야

일전에 서울의 우리나라 성공회대에서 재직중인 인도인 후세인 교수와 한국인 친구와 구로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한국인이 "야 더러워, 이 개XX 야"라는 욕설을 했던 큰 사건이 있었다.

이건 단순히 욕설을 한 문재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을 한 사건이기에 문제다.

그리고 욕설은 한 남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후세인 교수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어디서 왔어, 이 낌새 나는 XX야"라고 소리를 들을 때마다 슬슬 피한다.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이런 천박한 행동과 사고방식을 버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결국 이 남자는 경찰서에 잡혀갔다. 그때 후세인 교수는 "내가 백인이었다면 이런 일

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남자는 결국 인종차별의 죄가 인정이 돼서 재판까지 받은 걸로 안다.

그때 이 일로 한동안 떠들썩했는데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싸구려 순혈주의의 문제점을 일깨워 주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 길거리에서 백인을 만나면 괜히 다가가 쓸데없는 친절을 더 베풀려고 하면서, 동남아이나 다른 흑인들을 보면 낌새 낫다며 슬슬 피한다.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이런 천박한 행동과 사고방식을 버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유병숙·광주시 광산구 박호동

시설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여부 주민 뜻 따르라

순천도가 순천 마권 장외거래소(화상경마장) 설치 백지화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순천 화상경마장은 농식품부가 2006년 11월 지역민의 반대로 철회했다가 지난 4월 재승인하면서 논란이 증폭돼 왔다.

전남도가 백지화 요청은 타당하다. 화상경마장은 농식품부와 마사회가 주장한 것처럼 지역사회에 경제적·과금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백지화는 백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이번 상황에서 전남도가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백지화를 요구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지역갈등 등 심화시키고 지역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끼칠 수 있는 화상경마장 문제를 더는 끌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해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한 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 제정이 시·도교육위원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21일 시·도교위 등에 따르면 학원 교습시간을 2시간 앞당겨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 운영·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습시간 단축은 정부의 방침이자, 서울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이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례는 55~65%가 제한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교육위원회들이 제동을 걸고 학원 측의 입장에 대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위원회들이 수만명에 이르는 학원 종사자들의 '눈치'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차기 교육위원회들은 교습시간 단축안이 여론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만큼 교육 주체의 입장에서 서둘러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엄마, 나 텁피언 먹었어" "그래, 대한국민 만세다"

대한민국 중년 이상의 스포츠 팬이라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명대사'다. 1974년 프로복서 흥수환이 세계복싱협회(WBA) 벤더급 타이틀을 따낸 후 어머니 흥수환선녀와 나눈 감격의 대화다.

흥수환은 비행기를 여성 번이나 같아 타고 도착한 적이 있어서 아닐드 테일러를 세우고 아닐드 테일러(남아프리카공화국)를 네 차례나 다운시키며 15회 판정승을 거두고 텁피언 벨트를 거머쥐었다.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뒤 흥수환은 어머니의 유머러스한 전화통화로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민에 희망과 웃음을 함께 선사했다.